석유화학 합리화를 위한 제언(Ⅰ)

― 나프타 및 기초유분의 수급조정이 필요하다

국내 석유화학 산업이 가동률 제고 및 수출량 급증으로 호조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최근, 언론 보도 및 석유화학협회의 자료에 의하면 올해 1월 NCC 가동률이 105%에 달해 지난해 11~12월의 88~99%보다 높고, 합성수지·합성고무·합성원료 등 3대 제품 생산량도 57만6700톤으로 91년 1월의 40만1500톤보다 44% 늘었으며, 가동률도 96%로 11~12월의 89~91%보다 크게 높아졌다고 한다.
이중, 합성수지는 39만9900톤을 생산, 54%(91년1월 25만9600톤)가 증가했고, 가동률은 95%로 풀조업에 가까웠다.
이러한 상황만 보면, 국내 석유화학산업이 불황의 우려를 떨쳐버리고 즉시 호황에 접어든 듯한 착각을 일으키게 할 뿐만 아니라, 무모한 신·증설이 호황에 맞춘 선견지명의 소산인 양 운위될 수도 있는 듯 보인다.
특히, 요사이 중국지역 수출이 급증, 합성수지 재고가 바닥나고, 공급이 부족할 지경이라는 밑도 끝도 없는 소문은 우리의 아둔한 머리가 둔기로 얻어맞은 듯 멍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을 비롯 동남아지역 수출증가는 그들 지역의 수요가 갑작스레 늘어났거나 제품의 질이 좋아서가 아니라 가격이 낮기 때문이며, 그들의 공급요청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 수요량이 얼마나 되는지는 속단키 어려운 실정이다.
중국의 경우, 달러보유 상황에 따라 수요를 조정, 지속적인 공급처가 아니라는 데서, 동남아지역 수출의 허구성은 드러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한·중 무역협정」에 따라 35%에 이르던 관세율이 10%선으로 낮아져 경쟁력이 그만큼 높아졌으며, 홍콩을 통한 간접수출에서 벗어나 우리 업체들이 그들을 상대로 직접 협상을 벌이고 거래를 튼다는 점에서 보면, 물량이 늘어난 것은 자명한 이치일 것이다.
다만, 일시적 수출 수요 증가를 오판, 가동률이 높고 수출이 잘 돼 호황을 구가하고 있는 듯이 선전하는 것은 아주 그릇된 「짓」이라는 점 강조하고 싶다.
따라서, 현재의 일시적 수출증가에 연연하기 보다는 장기적 수출수요 예측이 필요하고, 여기에 맞춘 공급계획이 있어야 할 것이다.
결국, 국내 석유화학의 가동률을 조정, 국내 수요 및 수출 수요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말해주는 것으로, 현시점에서 업체들의 냉철한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동자부가 에너지 수급 및 「과소비」 억제 차원에서, 덤핑으로 적자상황에 처해있는 석유화학을 그냥 놔둘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 나프타 수입을 규제하겠다고 재삼 강조, 「덤핑」의 꼬리 잡히기만을 고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동자부는 올해 7936만배럴(수입 2836만배럴 포함)의 나프타를 공급한다는 계획아래 5월부터 수입을 규제할 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동자부 계획대로라면 석유화학 가동률은 연평균 74.3%를 넘지 못할 것이 자명하다.
동자부의 나프타 공급량 7936만배럴은, 국내 나프타 수요량 1억681만배럴의 74.3%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내 석유화학 산업계는 나프타 수급(수입)에 대처함은 물론, 변동비 수준의 수출가를 올리고 국내 가격 또한 일정수준(정상가의 80% 수준) 이하 거래를 자제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안의 하나로, 동자부는 나프타 공급량(NCC 및 BTX용)을 전체 수요의 85~90%선으로 규제하고, 상공부도 기초유분(에틸렌 및 프로필렌)의 수입을 추천, 규제하는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나프타 수입의 경우, 동자부의 수급계획에 무리한 점이 있다는 점에서 최소 공장 가동률 유지선인 85%는 넘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그 이하 가동은 적자를 면키 어렵다는 점 분명하기 때문이

다.
기초유분 수입추천의 경우, 생산량 조정으로 무리한 덤핑을 방지해야 한다는 점에서, 합성수지 공장 가동률도 85%선으로 억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대책은, 석유화학 산업계가 공감대 형성을 통해, 스스로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것은 사실이나, 오늘의 석유화학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점에서, 정부의 힘(행정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자유화에 걸맞는 자율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일정부분의 규제는 필요악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석유화학 산업의 진정한 정상화를 위해서….

<화학저널 1992/3/15>